

요약 및 정책건의

I.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소비는 서울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클 뿐 아니라 1인당 민간소비 지출액 규모나 소득 대비 소비수준도 여타 시·도에 비해 높아 경제 내에서 소비의 역할이 매우 중요
 - 2009년 서울의 민간소비 규모는 152.1조원으로 2000년 대비 1.8배 확대
 - 2009년 경상 지역내총생산(GRDP)에서 민간소비가 차지하는 비중도 59.1%로 2000년 대비 4.7%p 확대
 - 특히 2009년 서울의 1인당 민간소비지출액 수준은 129(전국 평균=100)로 전국 최고수준
 - 2009년 서울의 1인당 개인소득 대비 1인당 민간소비지출액 수준도 0.96으로 경기도(0.96)와 더불어 전국 16개 시·시점도 중 최고수준
- 가계소득은 가계소비의 원천으로 매우 중요할 뿐 아니라 소득격차 심화는 사회갈등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
 - 소득은 가계의 욕망충족과 노동력 재생산에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 가계의 미래위험 감소 등 미래생활의 안전판 역할
 - 소득격차의 심화는 소비의 결과인 가계후생 격차를 초래하고, 이는 사회갈등 심화와 안정성장을 저해
- 이러한 배경 속에 이 연구의 주된 목적은 서울시 가계의 소득 및 소비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정형화된 특징(stylized facts)을 파악하는 데 있음
 - 첫째, 서울지역 가계의 소득수준, 소득분포 및 소득불균등 정도를 분석

- 둘째, 서울지역 가계의 소비지출구조와 소비불균등도, 비목별 소득탄력성, 주요 가구 속성별 소비구조 등 소비관련 특징을 분석
- 셋째, 이를 토대로 서울시 복지 및 산업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
- 연구방법으로는 소득 및 소비관련 국내외 보고서 등의 문헌조사와 통계청의 가계소득동향 원자료를 활용한 통계분석, 관련 전문가그룹을 대상으로 한 자문회의 등을 활용

II. 주요 연구내용

1. 서울시 가구의 기본특성

- 2008년 서울지역 가구는 79.9%가 남성가구주이지만, 1990년 이후 여성가구가 증가하는 추세
 - 서울지역 여성가구주 비중은 1990년 12.0%에서 2008년 20.1%로 8.1%p 확대되었고, 특히,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크게 확대(1990~1997년 12.3% → 2000~2008년 18.9%)
- 2008년 서울지역 가구의 가구주 평균 연령은 약 48세로 30대 후반에서 40대 후반 사이가 가장 높은 빈도이지만, 정규분포와 비교할 때 60대 후반에서 70대 중반 연령층도 큰 편
 - 2008년 서울지역 가구주의 평균 연령은 1990년(38.7세)에 비해 약 9.3세 상승
- 서울의 경우 일반가구와 맞벌이가구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제고, 인구구조의 고령화 등에 힘입어 일반가구 비중은 축소되고, 맞벌이가구와 노인가구 비중이 높아지는 추세
 - 일반가구 : 1998년 73.5% → 2008년 67.7%, 맞벌이가구 : 1998년 21.2% → 2008년 24.7%, 노인가구 : 1998년 2.9% → 2008년 4.7% 등

2. 서울지역 가구의 소득특성

1) 가계소득 창출력 약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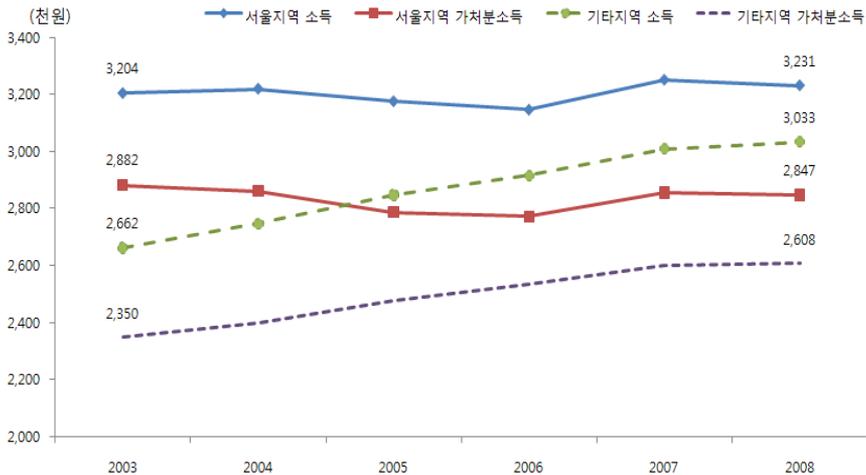
○ 2008년 서울지역 가구의 월평균 실질소득은 323만원으로 기타지역 대비 1.07배 수준이지만, 2003년 이후 그 격차가 지속적으로 축소되는 등 소득 창출력이 약화되는 조짐

– 기타지역 대비 서울지역 가구의 실질소득 : 2003년 1.20배 → 2005년 1.12배 → 2008년 1.07배

○ 이는 2003년 이후 서울지역 가계의 소득증가세가 기타지역을 하회하기 때문

– 2003~2008년 중 기타지역 가구의 월평균 명목소득은 연평균 5.8% 증가한 데 비해 서울지역 가구의 월평균 명목소득은 연평균 3.2% 증가

– 특히 실제 소비여력을 의미하는 서울지역 가계의 실질가처분소득증가율은 2003~2008년 중 -0.2%로 기타지역(2.1%)에 비해 매우 부진



(그림 1) 서울 및 기타지역 가구의 월평균 실질소득 추이(전가구 기준)

2) 속성별로는 노인가구, 모자가구, 저소득층 가구 등의 소득구조가 취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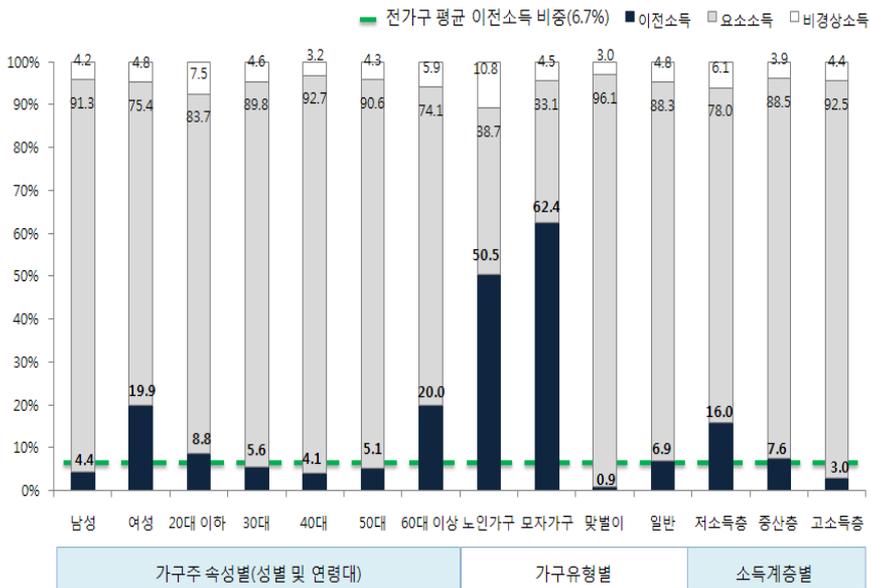
○가구 속성별로 볼 때, 노인가구, 모자가구, 저소득층 가구의 소득구조가 매우 취약한 것으로 분석

–노인가구와 모자가구는 총소득 중 절반 이상을 이전소득에 의존하는 등 매우 취약한 소득구조를 보유

• 2008년 노인가구와 모자가구의 이전소득 비중은 각각 50.5%, 62.4% (서울지역 전가구의 이전소득 평균 비중은 6.7%)

–또한 여성가구주와 60대 이상 가구주 가구의 이전소득 비중도 모두 20%를 상회하면서 근로소득 다음으로 큰 비중을 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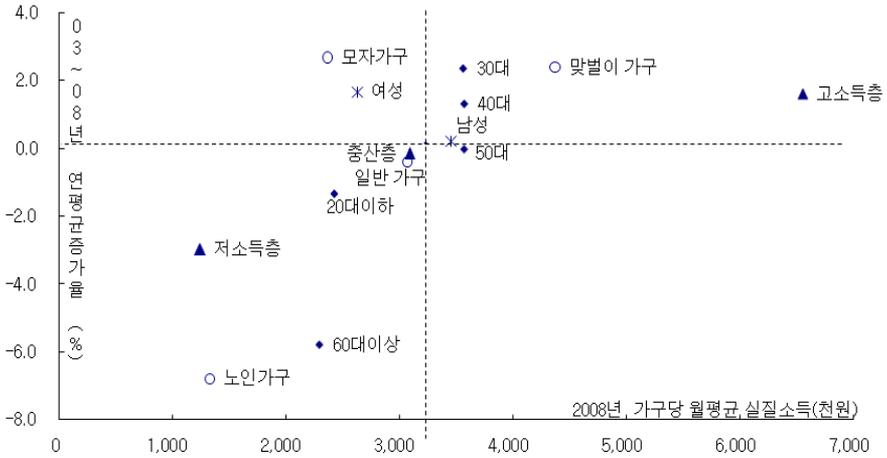
–1~3분위 소득계층인 저소득층 가구의 이전소득 비중도 16.0%로 매우 불안정한 구조



주 : 요소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및 재산소득의 합

〈그림 2〉 2008년 가구 속성별 총소득 내 소득원별 비중

- 특히 노인가구, 저소득층 가구 등의 경우 소득수준이 매우 낮은 가운데, 소득증가세도 매우 열위
 - 2008년 60대 이상 가구주 가구의 월평균 실질소득은 229만원으로 서울 지역 전가구 평균의 70.9%에 불과하고, 2003~2008년 중 연평균 실질 소득증가율도 -5.8%로 매우 부진
 - 이 중 65세 이상 가구원과 18세 미만 가구원으로 구성된 노인가구의 소득여건은 더욱 심각
 - 노인가구의 경우 2008년 월평균 실질소득은 133만원에 그쳐 서울지역 전가구 평균의 41.1%로 가장 낮고, 2003~2008년 중 연평균 실질 소득증가율도 -6.8%로 최저수준
 - 2008년 저소득층 가구의 월평균 실질소득도 124만원에 불과하고, 2003~2008년 중 연평균 3.0% 감소
 - 특히 2008년 1분위 계층의 월평균 명목소득은 68만원으로 2008년 보건복지부 공표 3인 가족 월 최저생계비(103만원)에도 미치지 못할 뿐 아니라 2003~2008년 중 연평균 실질소득증가율도 -6.1%로 모든 분위 중 가장 낮은 실정
 - 이에 비해 모자가구 및 여성가구주 가구는 소득수준이 낮지만, 소득증가율은 전가구 평균 수준을 상회
 - 여성가구주 가구의 2008년 실질소득은 263만원이며 2003~2008년 중 연평균 1.7% 증가
 - 여성가구주 가구 중 엄마와 18세 미만 미혼자녀로 구성된 모자가구의 2008년 실질소득도 236만원으로 낮지만, 2003~2008년 중 연평균 실질 소득증가율은 2.7%로 전가구 평균(0.2%) 수준을 상회
 - 반면, 30대와 40대 가구주 가구, 그리고 맞벌이 가구, 고소득층 가구의 경우 월평균 실질소득수준도 높고, 소득증가율도 서울지역 전가구 평균 수준을 크게 상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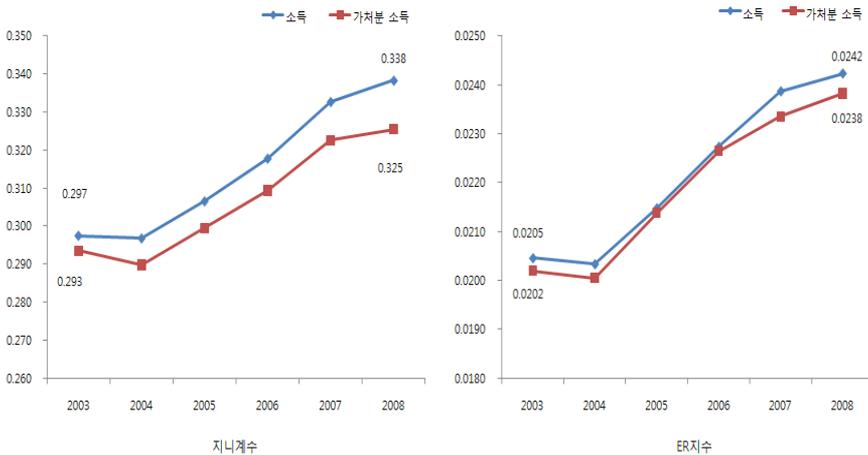


(그림 3) 서울지역의 가구 속성별 실질소득 수준 및 연평균 증가율

3) 소득불균등은 2003년 이후 심화되는 경향

- 소득증가세 격차로 인해 2003~2008년 중 전체 가처분소득에서 저소득층 점유율은 낮아지고 고소득층 점유율이 확대되는 등 소득불균등 심화
 - 저소득층의 가처분소득 점유율은 2003년 13.7%에서 2008년 11.7%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특히 1분위의 가처분소득 점유율은 1.8%에 불과
 - 반면, 고소득층의 점유율은 2003년 37.5%에서 2008년 39.2%로 상승하고 있으며, 특히 최상위계층인 10분위의 점유율은 23.4%로 모든 분위 중 가장 높음
 - 한편, 저소득층 근로자가구의 경우 외환위기 이후 소득증가세 둔화에도 불구하고, 소득 불확실성은 확대
 - 중산층과 고소득층의 소득증가율 변동성은 2000~2008년 중 각각 1.02, 1.49로 외환위기 이전 대비 1.8배, 2.5배 확대된데 비해 저소득층의 소득증가율 변동성은 1991~1997년 중 0.58에서 2000~2008년 중 2.15로 약 3.7배 확대

- 서울지역 전가구의 흑자율을 소득계층별로 보면, 저소득층은 적자상태가 확대되고 있는 반면, 중산층과 고소득층은 흑자상태를 유지
 - 2008년 저소득층 가구의 흑자율은 -14.6%로 2005년 이래 4년 연속 -10%대를 기록
 - 2008년 중산층 가구의 흑자율은 22.7%로 2004년 이래 20%대를 유지하고 있고, 고소득층 가구의 흑자율은 2008년 37.6%로 2005년 이래 4년 연속 흑자폭 확대
- 특히 서울지역 가계의 소득불균등과 소득양극화는 2003~2004년을 분기점으로 악화되는 양상
 - 2008년 서울지역 전가구 지니계수(소득기준)는 0.338로 2003년 대비 0.041p 상승하였고, 소득 5분위 배율도 2003년 5.070에서 2008년 6.653으로 1.538p 확대
 - 서울지역 가계의 소득양극화 수준도 2003년 이후 악화되는 추세
 - 서울지역 가계의 ER지수(소득기준) : 2003년 0.0205 → 2008년 0.0242



〈그림 4〉 서울지역 소득 및 가처분소득의 지니계수 및 ER지수

○ 또한, 서울지역 근로자가구의 연도별 소득분포 추이를 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이 발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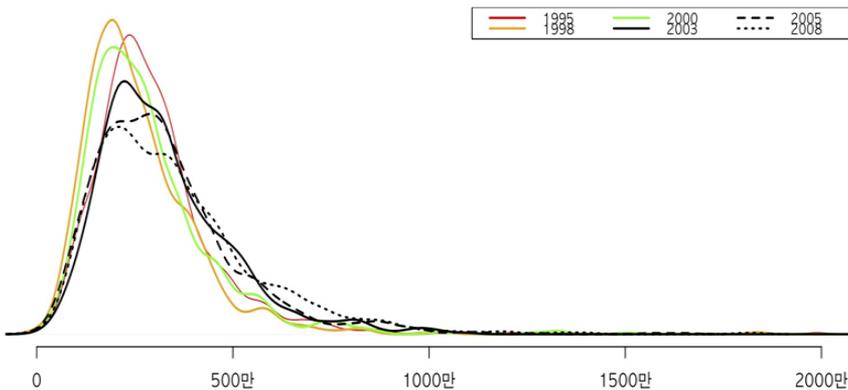
- 첫째, 외환위기의 여파로 서울지역 근로자가구의 소득분포가 1995년 수준을 회복하는데 상당시간 소요

- 1998년 실질소득분포는 1995년 분포에서 좌측이동한 후 점진적으로 우측이동을 하고 있지만 2003년에야 1995년 수준에 도달
- 분포 대표치로 보면, 1998년 외환위기 여파로 급감한 평균소득은 2000년에 1995년 수준까지 회복했으나, 가장 많은 가구가 몰려 있는 최빈소득은 2003년이나 회복되는 등 중저소득층의 소득회복이 매우 느리게 진행

- 둘째, 분포형태를 보면 2000년 이후 상대적으로 산의 고점이 낮아지고 더 넓은 형태로 변화

- 1995년, 1998년, 2000년의 소득분포 형태는 상대적으로 첨봉형태에 가까운 반면, 2003년, 2005년, 2008년의 소득분포 형태는 중봉형태
- 이는 과거 최빈소득 구간에 밀집된 가구가 최빈소득 상방이나 하방으로 이동하여 양극화가 심화되었다는 것을 의미

실질소득 (서울, 2인 이상 근로자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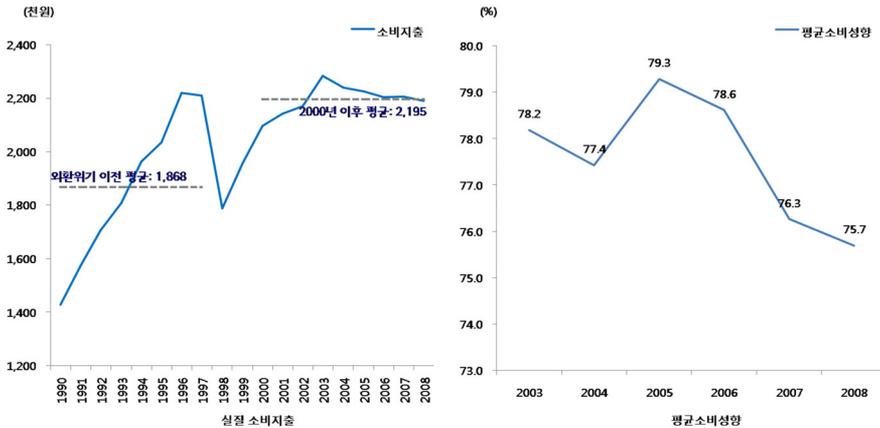


〈그림 5〉 서울지역 근로자가구의 실질소득분포

3. 서울지역 가구의 소비특성

1) 2000년 이후 실질소비의 증가세 둔화

- 2000년 이후 서울지역의 실질소비 증가세가 둔화되는 경향
 - 서울지역의 가구당 실질소비지출액은 1990~1997년 중 187만원에서 2000~2008년 중 220만원으로 높아졌지만, 증가세는 1990~1997년 중 6.4%에서 2000~2008년 중 0.5%로 크게 약화
 - 서울지역 가계의 평균소비성향도 2008년 75.7%로 2005년 한 해를 제외 하고는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
- 이러한 소비위축은 가처분소득 감소와 미래 불안감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을 반영하고, 향후 서울경제의 활력회복을 위해서는 소비여력 확충이 중요함을 시사



〈그림 6〉 서울지역 전가구의 실질소비지출액과 평균소비성향 추이

2) 소비위축에도 불구하고 가계소비의 서비스화는 진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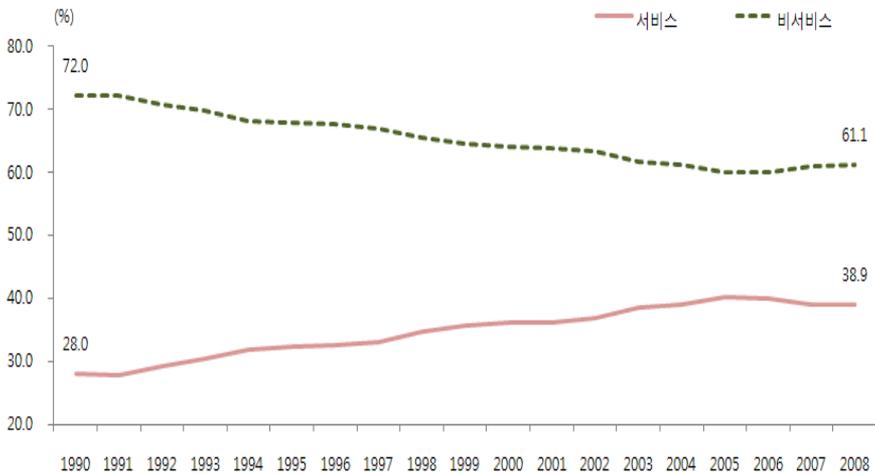
- 1990년대 이후 소득수준 향상에 따른 다양한 소비욕구 발현, 라이프스타일 변화 등에 기인하여 소비의 서비스화는 점진적으로 진행 중

-일반적으로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소비의 서비스화는 가속화

- 의식주 관련 소비지출의 양적 증가가 일정수준에 도달하면 자기계발, 여가활용, 사회적 교류와 소통 등의 욕구충족이 관심사로 대두

-2008년 서울지역 가계의 소비지출 중 서비스지출 비중은 38.9%로 1990년 대비 11.0%p 확대

- 반면, 비서비스지출 비중은 1990년 72.0%에서 2008년 61.1%로 축소



〈그림 7〉 서울지역 전가구의 서비스지출 및 비서비스지출 비중 추이

○특히 외환위기 이후 서울지역 가계소비의 서비스화는 통신, 교육, 교통 등이 주도

-서울지역 가계의 서비스지출 비중이 1990~1997년 중 30.6%에서 2000~2008년 중 38.3%로 확대되는 데 있어 통신, 교육, 교통 등의 비목이 각각 53.3%, 30.1%, 19.0% 기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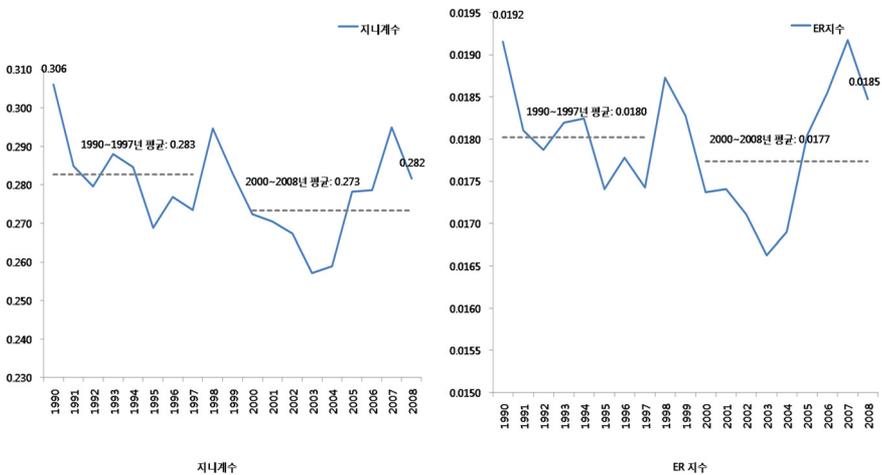
- 이 기간 중 의료보건과 교양오락은 다른 서비스 관련 비목과 달리 기여율이 -1.5%, -0.9%로 부진

- 반면, 비서비스지출의 비중은 1990~1997년 중 69.4%에서 2000~2008년 중 61.7%로 축소되었는데, 이중 식료품이 50% 이상 기여
- 교육, 교통, 통신 비목의 경우 소비비중과 평균소비성향도 높은 편
 - 2008년 교육, 교통, 통신 비목은 서비스 소비의 73.5%를 차지하고, 평균소비성향도 교육 9.9%, 교통 7.5%, 통신 4.3%로 전체 가처분소득의 21.7%를 위의 비목 소비에 사용
- 이는 지금까지 서울지역 가계지출의 서비스화가 기존통념과 달리 오락 문화 등 여가활용이나 의료보건과 같은 서비스보다 정보화 관련 서비스와 교육육구 충족 등을 위한 서비스에 집중되었음을 시사
- 한편 통신, 교육, 교양오락 비목의 소득탄력성은 다소 차별적
 - 2000~2008년 중 통신의 소득탄력성은 0.476으로 나타나 식료품(0.562) 등과 같이 필수재 성격을 보임
 - 이는 통신가격의 상대적 하락, 통신장비의 보급 확대 등 정보통신 이용의 대중화에 기인
 - 반면, 2000~2008년 중 교육의 소득탄력성은 1.331로 나타나 선택재 성격이 뚜렷
 - 이는 가계가 소득이 늘어날 경우 필수재 지출을 하게 되면 우선적으로 교육관련 지출을 확대할 의향이 있고, 교육서비스에 대한 양적 측면보다 질적 측면에서 오는 만족감을 더 크게 느낀다는 것을 의미
 - 교양오락의 소득탄력성은 2000~2008년 중 1.253으로 준선택재적 성격을 지니고 있어 향후 소득증대가 뒷받침될 경우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

3) 소비불균등은 소득불균등보다 다소 양호

- 1990~2008년 중 서울지역 가계의 소비불균등은 소득불균등과 달리 외환 위기 전후 큰 변화가 없으나, 최근 몇 년간 확대되는 모습

- 가계의 소비불균등지수는 1990~1997년 중 0.283에서 2000~2008년 중 0.273으로 오히려 소폭 하락하여 상대적으로 소비격차는 적은 편
 - 소득격차가 확대되어도 그 소득격차가 소비격차로 확대되지 않은 것은 소득증가가 다 소비되는 것이 아니고, 특히 고소득층일수록 저축률이 높기 때문
- 그러나 2003년 이후 소비불균등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이고, 이러한 패턴은 소비양극화 추이에서도 동일하게 발견
 - 소비불균등지수 : 2003년 0.227 → 2008년 0.282
 - ER지수 : 2003년 0.0166 → 2008년 0.0185



〈그림 8〉 서울지역 소비지출의 지니계수 및 ER지수

○ 즉, 서울지역 가계의 경우 소비의 불균등 및 양극화 수준은 소득에 비해 아직은 낮지만, 2003년 이후 소득과 소비 모두 불균등 및 양극화가 확대되고 있음을 시사

4) 소비특성은 가구 속성별로 차별화

○가구주 연령대별 가계소비 구조를 보면 다소 차별적

-20대 이하 가구주 가계는 트렌드에 민감하고 여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젊은 가구주의 가치관을 반영해 기타 연령대와 달리 교양오락 비목의 소비비중(8.0%)이 3대 소비비목에 포함

- 또한 전가구와 비교한 소비구조도 주로 교양오락과 통신, 피복 및 신발, 가구집기 등에 특화된 구조

-30~50대 가구주 가계의 3대 소비비목은 모두 식료품, 교육, 교통이지만, 40대 가구주 가계의 경우 주로 교육에 집중된 형태를 띠고 있음

- 40대 가구주 가계의 평균소비성향은 2008년 83.4%로 가장 높지만, 교육지출 비중이 23.3%로 전가구 평균을 10.2%p나 상회하는 반면, 여타 서비스관련 지출비중은 모두 전가구 평균을 하회

- 이는 40대 가구주 가계의 경우 다른 비목에 대한 지출을 최대한 축소하고 교육비목 관련 지출에 모든 자원을 동원하고 있음을 의미

〈표 1〉 2008년 서울지역 가구주 연령대별 소비수준 및 주요 소비비목

(단위 : 만원)

구 분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액		3대 지출비목
		상대적 수준 (전가구 평균=100)	
20대 이하	166.4	69.7	식료품(24.8%), 교통(8.9%) 교양오락(8.0%)
30대	246.1	103.0	식료품(24.6%), 교통(13.0%), 교육(10.4%)
40대	273.4	114.5	식료품(23.0%), 교육(23.3%), 교통(8.4%)
50대	248.4	104.0	식료품(26.2%), 교통(9.9%), 교육(8.2%)
60대 이상	175.8	73.6	식료품(30.5%), 의료보건(9.1%), 교통(7.9%)

주 : 3대 지출비목 선정 시 기타지출은 제외

-반면, 60대 이상 가구주 가계의 3대 소비비목은 식료품, 의료보건, 교통

으로 건강에 대한 관심 및 의료복지 수요를 반영

- 의료보건의 소비비중이 9.1%로 식료품 소비 다음으로 높은 편

○가구 유형별 소비구조를 보면, 일반가구와 맞벌이가구는 전반적으로 전가구와 유사한 형태지만, 노인가구와 모자가구는 다소 차별적

-노인가구의 소비구조는 주로 식료품, 의료보건 등에 집중된 형태

- 특히 2008년 식료품 소비비중이 31.1%에 달할 정도로 앵겔계수가 매우 높고, 의료보건의도 15.4%에 달함

-모자가구의 소비구조는 전가구와 비교해 교육관련 지출에 집중

- 2008년 교육 비중이 25.8%로 식료품 비중을 상회할 정도로 제1의 소비비목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 이는 여성 가구주가 생계를 위해 타 기관에 양육 및 교육을 맡기는 경우가 많고 교육에 대한 관심도 여타 가구에 비해 높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

〈표 2〉 2008년 서울지역 가구유형별 소비수준 및 주요 소비비목

(단위 : 만원)

구 분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액		3대 지출비목
		상대적 수준 (전가구 평균=100)	
노인가구	143.9	60.3	식료품(31.1%), 의료보건(15.4%), 광열수도(6.7%)
모자가구	200.8	84.1	교육(25.8%), 식료품(22.4%), 통신(5.8%)
맞벌이가구	276.3	115.7	식료품(24.1%), 교육(15.3%), 교통(11.3%)
일반가구	233.5	97.7	식료품(26.1%), 교육(12.2%), 교통(9.7%)

○소득계층별 소비구조를 보면, 계층별 소득격차가 큰 가운데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식료품 비중이 높아지고,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교육비중과 교통비중이 증가하는 경향

-저소득층 가구의 소비구조는 전가구 평균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식료품, 주거, 광열수도 등 기초생계유지를 위한 비목의 비중이 높으며, 교육비 지출은 다소 낮은 편

- 저소득층의 소비수준도 전가구 평균의 58.4%에 불과한 반면, 고소득층은 1.59배에 달하여 소비에서 사회적 위화감 조성 우려
- 이에 비해 중산층 가구의 소비구조는 전반적으로 전가구 평균과 유사하며, 고소득층 가구는 상대적으로 교육, 교통, 교양오락의 지출비중이 높은 편

〈표 3〉 2008년 서울지역 소득계층별 소비수준 및 주요 소비비목

(단위 : 만원)

구 분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액		3대 지출비목
		상대적 수준 (전가구 평균=100)	
저소득층	139.6	58.4	식료품(28.9%), 교육(8.0%), 교통(7.6%)
중산층	235.2	98.5	식료품(26.4%), 교육(13.5%), 교통(9.0%)
고소득층	380.0	159.1	식료품(22.7%), 교육(13.6%), 교통(11.4%)

Ⅲ. 시사점

- 2003년 이후 확대된 소득불균등과 소비패턴 변화 등은 서울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
- 첫째, 소득불균등 해소를 위해 경제취약계층의 소득제고방안을 강구
 - 소득분포형태, 소득계층별 소득수준 추이와 가처분소득 점유율 등을 고려할 때 양극화 문제 해결에 앞서 우선적으로 소득불균등 문제 해결에 주력할 필요
 - 양극화 문제는 별도의 정책 추진보다 ‘더 좋은 더 많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양한 전략 산업군을 육성해 중산층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
 - 소득불균형 해소를 위해서는 공적연금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모니터링 강화와 함께 취약계층의 일자리 알선 및 교육 프로그램 강화

- 가구 속성별 소비패턴을 고려하여 적재적소의 맞춤형 복지서비스 구현으로 시장 내 유효소비 진작
 - 저소득층 노인가구를 대상으로 한 의료보건 복지서비스 확대와 여성 가구주 가계를 위한 사교육비 절감책 등 복지정책의 타깃을 명확히 설정한 후 추진(일종의 ‘surgical strike’ 전략)
- 가계소비의 서비스화와 소비성향을 고려한 유망산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육성해 지역 내 다양한 일자리 및 소득 창출

소비·생산·소득의 선순환 구조 정착



〈그림 9〉 서울지역 소득 및 소비특성에 기초한 정책방향

- 경제 취약계층의 소비수요를 고려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구현
 - 저소득 노인가구를 대상으로 한 정기건강검진, 원외약제비지원, 간병지원 등 의료보건 복지서비스 확대
 - 모자가구를 포함한 여성가구주 가구는 교육 및 보육서비스 확대를 통해 가계의 안정성 제고
 - 공교육 기반강화 및 저소득층 대상의 교육바우처 사업 확대를 통해 저소득층의 사교육비지출 부담 축소
 - 가령,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와 같은 서비스 형태를 토대로 중·고등학생 자녀가 있는 저소득층 가구로 서비스를 확대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서울형 교육서비스 바우처 사업)
 - 여성가구주 가구의 증가 추세 등을 감안할 때, 취학전 자녀의 보육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필요
 - 여성의 안정적 사회활동 지원을 목표로 서울형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의 경우 양적 확대에서 표준프로그램 발굴 및 제공 등 질적 확대에 정책초점을 맞출 필요
 - 특히 여성가구주의 출산 및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을 예방하기 위해 만 2세 이하의 영아 보육을 위한 영아전담 보육시설 확충
- 소비의 서비스화를 고려하여 의료보건, 교육, 레저 등 유망산업 육성
 - 인구구조의 고령화 추세, 연령을 불문한 성인병, 암 등의 발병률 증가 등으로 인한 건강에 대한 관심 증대로 의료보건 서비스 수요는 앞으로 더욱 확대될 전망
 - 의료서비스는 공급을 이분화하여 필수적 의료서비스는 복지정책으로 지원하는 반면, 선택적 의료서비스는 시장경쟁을 촉진하여 고품질의 서비스를 합리적 가격에 공급할 수 있는 시장환경 조성
 - 특히 의료서비스의 패러다임 변화, U-IT 기술의 발전 등을 고려할 때, U-헬스케어산업을 조기에 육성해 산업화할 필요

- 교육에 대한 높은 소득탄력성 등을 고려할 때, 향후 교육서비스는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
 - 서울지역 교육서비스의 소득탄력성은 1.331로 11개 비목 중 가장 높은 수준
 - 학원 등 오프라인 위주의 교육산업에서 탈피해 유아-학생-직장인-노인 등 생애별 온라인 교육서비스(e-learning) 및 교육콘텐츠 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출판, 미디어콘텐츠 등의 연관산업과 유기적으로 연계
- 향후 소득증가와 여가에 대한 니즈 증대를 감안하여 문화콘텐츠, 스포츠 등의 레저산업을 적극 육성하되, 다양한 소비층을 염두에 둔 서비스를 개발할 필요
 - 고소득층으로 갈수록 교양오락의 소비비중이 증가함을 고려하여, 고소득층 수요를 반영하는 고급 문화산업(요트 및 오페라 등)을 개발
 - 저소득층의 경우 여가선용을 위한 체험형 레저(북한산 둘레길, 서울성곽길, 서울 숲 등)와 같은 문화자원 개발과 문화 바우처 발행을 통해 다양한 소득계층의 접근성 제고
- 서울지역 취약계층의 소득안정성 제고
 - 서울지역의 경우 저소득층 가계에서 적자가계가 상당수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단기적으로는 공적부조 확대를 통한 기초적 소비후생을 증진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일자리 창출을 통해 소득창출력 제고
 - 우선적으로는 각종 공적부조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공적부조에 대한 체계적인 모니터링과 문제점을 보완하여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
 - 노인 및 여성의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과 창업 교육을 통해 가계의 안정적인 소득원 발굴
 - 노인가구의 경우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 등 공공취업알선 기관으로의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취약하므로 동별 자치센터를 통한 주거지 밀착형 일자리 알선 시스템 구축이 필수적

- 노동생산성이 낮고, 구직자의 적극적인 시장참여도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공공일자리 및 사회적기업 확산을 통한 착한 일자리 창출 및 발굴 추진

-여성가구의 경우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혹은 취업 포기 사례가 많음을 감안하여 재취업 교육 및 전문상담 인력을 배치해 운영할 필요

- 현재 운영 중인 시립직업전문학교, 일자리 플러스센터 등을 활용하여 출산 이전 경력을 고려한 여성의 재취업 및 전업상담 창구 마련
- 일과 보육이 양립할 수 있는 사회복지 구축을 통한 근로환경 조성도 병행

-또한, 소규모 창업기반을 위한 기술과 능력 개발 교육 및 창업자금지원을 확대하여 가계의 안정적 소득원 발굴

- 현재 운영하고 있는 서울시 창업교육 프로그램의 대상을 청년에서 여성까지 확대하고 동시에 창업교육 콘텐츠도 여성의 강점을 살릴 수 있는 교육서비스, 문화여가서비스 쪽으로 확대